요약

I. 서론

- IMF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방 경제의 불황에는 지방 건설산업과 유통산업의 침체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본 연구는 지방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.
- 이를 위하여 지방 경제와 건설산업의 실상 및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분석과 지방 건설 수요의 추이와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II. 지방 경제와 지방 건설산업

- 지방 경제와 지방 재정 및 지방 건설의 삼자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갖고 순순환 또는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함.
- 지방 경제에 대한 지방 건설산업의 역할로는
 - 첫째, 높은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 등 단기적으로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함.
 - 둘째, 지역 내 SOC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역할을 통하여 지역 경제 성장의 기반을 제공함.
 - 셋째, 대도시 지역의 경우 지역내 기반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도 함.

III. 지방 경제와 건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

□ IMF이후 지방 경제 침체 현상 심화

- 1998년 이후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의 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.
 - 1997년 대비 2000년의 지역경제회복지수가 전국 평균 대비 수도권이 153.9%인 반면, 비수도권은 71.4%임.

- 그 결과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경제력 비중이 1997년도의 51.3대 48.7에서 2000년에는 52.6대 47.4로 확대되고 있음.
- IMF 이후 비수도권 지방의 경제 침체는 이 지역 제조업 등 전통적 기반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지방건설산업의 침체가 지방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.

□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 지방의 건설수요 부진 심각

- 전년 대비 건설 수주액 증가율이 수도권은 1999년 이후 2001년 10월까지 계속 플러스 증가한 반면, 비수도권은 1999년에 -15.1%를 기록하였고, 2001년에 들어와서도 1~10월 현재 -4.9%를 기록하고 있음.
- 건축허가 동향 역시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이 저조한 양상을 보임.
- 이러한 수요 부진의 상황에서도 지방의 건설 업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업체당 평균 계약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.
 - 비수도권 지역의 업체당 평균 계약 실적은 1997년도에는 110억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35억원으로 1/3수준으로 감소
- 건설 경기 BSI 지수가 서울은 2001년 9월 이후 100을 상회하는 반면 지방은 여전히 80대 수준에 머물고 있음.

□ 지방 건설업의 지역 경제에 대한 비중 및 역할 하락

- 비수도권의 경우 GRDP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이 1997년의 13.9%에서 1999년에는 9.9%로 하락
- 지역 고용 비중 역시 비수도권은 1997년 9.6%에서 1999년에는 7.1%로 하락
- 비수도권의 경우 건설업은 지역경제 성장에 대하여 1998년도에 -2.0%, 1999년도에 -1.6%로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음.
- 1997~1998년도 기간 중 비수도권에서는 총 371천명의 취업자 감소가 일어났는데 이중 245천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음.

IV. 지방건설 수요의 변화 추이

□ 민간 부문의 발주 물량 가장 크게 감소

- 중앙정부 발주 물량은 여타 발주자보다 상대적 물량 감소가 적은 편이나 1998년 이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감소 폭이 다소 큼.
 - 1997년도 기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비중이 3.7:1이었으나 2000년에는 2.7:1로 축소
- 지방자치단체 발주 물량은 1998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급격하게 감소함.
 - IMF 이후 취약해진 지방재정 상황에 기인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물량 감소가 더 큼.
- 국영 기업체 및 공공기관은 전통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발주 비중이 높은 편이며, 1998년 이후 역시 큰 폭의 물량 감소가 나타남.
- IMF이후 발주자 유형 중 민간부문의 발주 물량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.
 - 비수도권의 경우 1997년 대비 1998년도에는 무려 70.3%나 감소하였음.
 - 1997년까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중이 45:55로 비수도권이 높았으나 1998년도에는 60:40으로 역전되었음.

□ 상품 유형별로는 아파트 부문의 물량 감소가 가장 큼.

- 도로 부문은 1998년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둘 다 비슷한 패턴으로 감소되고 있음.
- 아파트 부문은 비수도권의 경우 1997년 대비 1998년의 물량이 1/3수준으로 급감
 - 1996년까지 비수도권의 아파트 건설 물량이 수도권보다 컸으나 1997년 이후 반전되고 있음.
 - 2000년 현재 비수도권 물량이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.
- 상업용·사무용 건물은 수도권, 비수도권 둘다 1998년에 급격하게 감소
 - 1997년 대비 1998년도 물량이 양 지역 모두 1/3수준으로 격감

- 공업용 건물 역시 1998년도 이후 양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으나, 특히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.

□ 민간 건축부문 부진은 궁극적으로 지방 경제의 침체에 기인

- 비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IMF 이후 시점인 1998년도부터 거의 모든 발주자 및 상품 유형에서 발주 물량이 감소했으나, 특히 민간부문 그 중에서도 아파트 부문의 물량 감소가 크게 나타남.
 - 비수도권의 경우 상업·사무용 건물과 공업용 건물 발주 물량 역시 IMF 이후 급격하게 감소
 -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 주택 보급률 상승 경향과 함께 지방 경제의 침체로 민간의 주택 및 건축 부문 전반에 대한 구매력 감소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.

V.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건설산업 육성 방안

□ 기존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지방 경제에 대한 효과 미흡

- 금년 들어 정부는 지방도시 신시가지 개발,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, 재래시장 재개발·재건축 추진, 국민임대주택 건설,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건설산업 관련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효과는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났음.
- 지방의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 정책 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.

□ 중앙정부의 SOC 투자 예산 확대 필요

- 지방건설 경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여야 함.
- SOC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민자사업을 확대하는 반면, 지방은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함.
-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된 국토개발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매년 SOC 예산을 20조원 내외로 지속하여야 할 것임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확대를 위한 재정능력 보강 유도 필요

- IMF 이후 지방 경제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여 지방 정부의 지역개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.
- 현행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재원(지방양여금, 국고보조금, 특별교부세,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등)을 확대하고,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검토 필요
- 또한,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추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채 인수를 위한 기금 확대 또는 인수전담금융기관 설립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지방채 발행 유도가 필요함.

□ 민자사업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 필요

- 민자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보조, 채무보증 등 역할 확대가 요구됨.
- 신속한 사업 추진과 프로젝트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추진도 검토할 필요 있음.
 -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.

□ 지방 특성에 맞는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필요

- 지방 신도시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주거와 산업이 동시에 입지하는 복합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여야 함.
- 사업개발방식에 있어서는 사업의 조기 추진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신속한 계획의 추진과 직접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됨.

□ 지방도시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, 리모델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

- 지방도시의 경우 도심지의 낙후 또는 슬럼화로 지역 경제의 침체가 가속되고 있음.
- 현행 재래시장 재개발·재건축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도심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.
- 특히, 「건축법」에서 유도하고 있는 리모델링 방식을 통하여 기존 도심 또는 시가지 구역의 활성화 유도 필요

□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육성·보호 정책 필요

-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물량은 지방정부가 자체 발주하도록 하고, 이 경우 지방중소업체를 보호하는 현행 입찰 제도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음.
-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를 살리면서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·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